

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계획(안)

1.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

○ 기본인식

- 3차 시뮬레이션 및 항만 관제권,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 등에서 확인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으로 인해 해군기지 갈등 해결 요원하다고 판단.
-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음.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 강행으로 인해 기지건설 관련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음
- 주민들은 70일간의 검증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, 그리고 제주도정에게 있음.

○ 공사 70일 검증결과에 대한 시민/국회 평가 활동

- 70일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회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활동
-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발행
-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

○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각계 설명회 개최

- 제주해군기지 미해결 갈등 쟁점에 대한 홍보자료 발간
- 제주해군기지의 절차적, 환경적, 기술적, 군사안보적 문제점 정리, 배포
- 제주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각계협력 강화

○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행동 지원연대

-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정당하며, 이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연대하는 것은 전국대책회의에 주된 임무임
- 특히, 주민 동의 없는 군관사 부지 추가수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대행동을 강화할 예정임.

2.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

○ 기본인식

- 해군기지 건설공사 재검토 및 반대 운동과 병행하여,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안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주민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.

○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

- 강정마을회,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과 더불어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, 이를 위한 공동기구 구성
- 이를 위해 지금까지 16차례 진행해온 제주해군기지백지화를 위한 전국행동의 날 행사와 생명평화마을가꾸기 문화행사를 연계
- 전국 400여명의 작자들이 동참한 강정평화 책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

3. 제주도의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평화의 섬 운동 추진

○ 기본인식

-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'적기 추진'을 공약한 가운데, 해군기지 외 공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. 이어 대공대함미사일기지, 병참 기지 등이 연이어 건설될 것이 자명함.
- 특히,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략적 회귀(Pivot to Asia-pacific) 전략에 따라 제주도가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군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.
- 이는 도리어 해양의 군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미중해양 패권경쟁에 휘말리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나 해양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.

○ 세계평화의 섬 제주 되살리기 운동

-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근본취지대로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가 아

- 년 평화와 교류의 섬으로 되살리기 위한 범도민, 범국민 운동 추진
- 특히 해군기지에 이어지는 공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제주도의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발전적으로 확대

4. 주민 활동가에 대한 법률지원, 인권옹호 활동 강화

○ 기본인식

- 주민 신뢰와 동의 없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허구적 구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체포, 구금 등 신체적 위협, 그리고 벌금, 가압류 등을 통한 재정적 압박과 위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.
- 주민들의 평화적인 저항과 반대운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/국제 연대활동을 배가하는 것이 요구됨

○ 법률지원 활동 및 재판/벌금 공동대응 강화

- 민변 등 소속단체를 통해 전국대책회의 차원의 주민과 평화활동가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구조 기금 적립
-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주민과 활동가들간의 공동대응 공동부조 강화

○ 국내외 인권옹호자 지원 제도/인력 활용

-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한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활동 지속
- 구속자 석방과 국제평화활동가 입국 제한조치 철회를 위한 국내외 소송, 캠페인 진행

○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소송, 공유수면매립면허 거부처분 취소소송 지속

5. 상반기 전국 집중 행동 계획

- 4·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 공동행동 (4월1일부터 4월 6일(토)까지)

- 주최: 강정마을회, 제주범대위, 전국대책회의 등
- 4월 1일 <4.3정신계승, 해군기지 철회> 공동성명 발표
- 4월 3일 수요일 7시 제주벤처마루 <작가, 평화와 연애하다> 콘서트
- 4월6일 전국집중 4·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

○ 제주포럼 대응 시민사회생명평화포럼 개최

-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될 제주포럼에 대응
- 제주포럼 예정지인 해비치 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,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국제포럼 및 문화제 개최